여권 ‘원점 카드’로 돌파구 찾기

〈절차논란 해소〉

청와대 ‘전효숙 재판관’ 인사청문 요청키로
비교섭 소야3당도 국회 표결처리 움직임

전효숙 인준파문 새국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한나라당을 제외한 비교섭 야3당도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열린우리당이 청와대에 전효숙 헌법재판관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곧 처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인사청문특위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에서 병합 진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가 인정이 안 되고 있어 청문 요청을 다시 낸 것”이라며 “절차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요청하게 되면 국회 법사위가 인사청문 과정을 진행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과정을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기간 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국회가 연장 기간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와 상관없이 직접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끝까지 거부해 인사청문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은 최장 30일 기간 안에 전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전효숙 후보자는 헌재에 다시 복귀한 상태에서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을 유지하게 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절차상 문제도 해소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 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표결에 불참했던 비교섭단체 야 3당도 다음 본회의 처리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국회 처리에 가장 적극적인 야당은 민주노동당으로 절차적 미비점만 해소된다면 국회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노당은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절차적 미비점만 해소되면 남는 것은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국회 표결 처리 방향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은 독선과 오만은 여당 수준을 넘어섰다”며 “야 3당간의 합의 등이 남아 있어 아직 표결 참여 여부는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의 몰상식한 태도에 많은 의원들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해 표결 참여를 시사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9일 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과 관련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정부·여당의 발목만 잡으면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책임한 정당인 한나라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한나라당이 강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헌재의 위상과 절차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황우여 사무총장은 “전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 하는 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헌법재판소 소장 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희옥 재판관 등 신임 헌재 재판관들이 나란히 서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5·31 지방선거비용 실사 해보니

줄이고·부풀리고·빼고… 위법 235건 무더기 적발

20건 고발·수사의뢰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쓰인 후보자와 당선자의 선거비용을 실사한 결과 광주·전남에서는 235건의 위법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31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자료 및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14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6건은 수사의뢰했으며 사안이 경미한 215건에 대해선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자의 경우 재판에서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직계 존·비속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내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위법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24건, 광역의원 선거 46건, 기초의원 선거에선 165건이 각각 적발됐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소속 86건, 열린우리당 41건, 민주노동당 10건, 한나라당 3건, 한미준 2건으로 집계됐다.

위법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36건, 회계보고서 허위기재 및 위변조·누락이 27건 등이었다.

광주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A씨와 선거사무장은 자원봉사자들에게 12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팀장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광역의원 출마자 B씨는 자원봉사자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만원을, 활동비로 70만원을 주는 등 모두 2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위법사례 적발건수는 지난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때보다 상당폭 줄어 들었다. 전남지역의 경우 2002년에는 283건에서 올해는 209건으로 26%가 줄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2천248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005년도 정당 및 국회의원 후원회의 정치자금 실사 결과 14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7건을 고발, 2건을 수사의뢰하고 133건을 경고 및 주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고보조금을 법정용도 외 사용하는 등 감액사유 21건이 발견돼 총 우리당 3억614만원, 한나라당 2억3천988만원, 민주당 3천539만원, 민주노동당 1억7천296만원 등 모두 7억5천439만원을 감액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
주선회 재판관 선출

헌법재판소는 20일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전체 긴급 회의를 열고 공석인 소장 대행으로 주선회 헌법재판관〈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평의를 열고 위헌법률 심판 사건 등의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 결정이 가능하다.

한편 주 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빠른 시일 내 공석 사태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만기자 man21@

“민주 정치적 매춘행위” “우리당은 악덕포주”

‘한나라 러브콜’ 놓고 원색공방

20일 국회에서는 ‘한나라당-민주당’의 관계를 둘러싸고 ‘매춘’, ‘포주’, ‘패륜’이라는 단어까지 동원되는 등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간의 원색적인 공방전이 펼쳐졌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거론되고 있는 ‘한-민 공조’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정치적 매춘행위를 하니까 수구 정당이 민주당을 탐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열린우리당의 거듭된 국회 처리 부탁에도 불구, 지난 19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불참한 민주당에 대한 배신감이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민주당은 과거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한 것을 상기시키며 ‘적반하장’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

유종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에 권력을 통째로 줄 테니 동거정부를 구성하자고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은 열린우리당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며 “자기들은 한나라당을 향해 공개구혼을 하면서 민주당이 러브콜을 받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재두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해 여름 내내 정권을 통째로 줄 테니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하자고 애걸복걸했던 열린우리당이 남을 욕하고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며 “열린우리당은 약자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정치적 악덕 포주”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이를 지켜보던 한나라당은 박영규 부대변인을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는 합리적 보수세력 간의 연대로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행위”라며 “이를 매춘행위로 묘사한 것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패륜적 행위”라며 민병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결국,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로 협조가 절실한 입장인 우리당이 결국 한발 물러섰다.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 위원장의 발언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지도부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盧대통령 “성장이 일자리 해결하던 시대 끝나”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외부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후생 복지 향상과 경제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도 지속할 수 없거니와 성장의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별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 보고회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성장이라는 것은 성과가 따로 있고 국민의 후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후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회경제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이 국민경제의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성장이 바로 일자리 문제와 국민의 후생문제를 해결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고,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절벽 끊어지듯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히 변하고 있다”며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성장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고 국민후생도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성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그런데 성장은 똑같이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같이 보이고, 그것은 일자리 없는 성장의 추세가 아주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쳐 대책을 세우자, 국가전략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전략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전략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해봤는데 성장만을 쫓기 시작한 조직의 관성이 있어서 실제로 참 잘안됐다”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